윤일병 사건 은폐 의혹…軍수뇌부 문책론으로 확산

선임병 집단폭행·가혹행위 사실 3개월 가까이 '쉬쉬'

여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국방부 "전면 재조사"

28사단 윤모(21) 일병이 부대 전입 이후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집단 구타로 사망한 사실을 군 당국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軍) 수뇌부 문책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28사단 사건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6일 오후 윤 일병이 선임병들의 집단 폭행으로 쓰러지자 "윤 일병이 음식물 취식 중 의식을 잃었다"고 소속 대대 지휘통제실로 보고됐다가 당일 밤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윤 일병이 쓰러졌다고 정정 보고됐다.

28사단 헌병대는 다음날인 4월 7일 선임병들이 사고 당일 윤 일병을 어떻게 폭행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군 검찰이 5월 2일 피의자를 기소할 때는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였으며, 매일 야간에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고 간부가 폭행을 방조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고 발생 다음날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맞고 쓰러진 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언론에 알렸을 뿐 이후 윤 일병이 당한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5월 22일 이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임병들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심리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일병의 유족들이 수사기록을 요구했지만 군 당국은 제공하지 않았다. 군 당국이 사건의 심각성을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결국 군 당국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뒤 3개월 가까이 지난 7월 31일 군 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을 통해서야 윤 일병 사망사건의 심각성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군 당국의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휘 계통을 통해 제대로 보고됐는지, 쉬쉬하고 덮으려 한 건 아닌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한민구 국방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며 "사건 발생시점이 4월 7일(윤 일병 사망일)인데 국방부는 4월 9일 단순폭행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했다. 7월31일 시민단체의 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굳은 표정 군 수뇌부 한민구 국방장관(왼쪽)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윤모 일병 폭행치사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의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으로 군 수뇌부를 향한 여론의 비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어 군 수뇌부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군 차원에서 전면 다시 조사한다고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며 "이와 함께 여러 (지휘)계선상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 확인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軍수뇌부 보신주의…잘못하면 군대 망한다"

여야,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질타

靑 "문책보다 진상조사가 우선"

한민구 국방장관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의 4일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선임병으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받다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진단을 내놓으려는 노력이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군내에 장군단이 직책을 맡으면 대과 없이 지나가겠다는 보신주의에 파묻혀 있는데 잘못하면 군대 망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윤 일병 사망 직후 보도자료에는 '일요일 오후에 회식하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는데 이는 명백히 축소, 은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차라리 엄마에게 이를 수 있도록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구타가 아닌 고문치사 사건"이라면서 "구태의연한 정신교육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신세대 의식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면서 "대체 군 간부는 부대 장악이나 부하 신상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장병의 인격이 존중되는 인권의 모범지대가 되도록 병영문화를 쇄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최초에 사실을 인지한 때와 중간에 시간이 가면서 밝혀지는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면서 "최초에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노력했고, 그렇게 보고돼서 그 내용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권 참모총장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보유 허용에 대해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군 수뇌부의 문책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 국방 "추가 수사 지시…재판관할권 3군사령부로 이전"

28사단장 보직해임 징계위 회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절차 2~3주로 대폭 단축

지휘관·군의관·전문상담관 심의 '관심병사' 분류

■ 국방부 병영내 사건·사고 예방책

국방부가 병영 내 사건·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를 대폭 단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정신과 진단서 생략 등 행정서류 간소화를 통해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를 기존 2~3개월에서 2~3주로 단축했다"며 "이런 방안은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신과 군의관 진단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상담관의 관찰결과와 지휘관 소견을 바탕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하고 있다"며 "병영 부적응 병사를 부대에 오래 잡아두는 것보다는 빨리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과 보호관심병사들의 자살, 28사단 폭행 사망사건 등 최근 잇따른 병영 내 사건·사고를 줄이려면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를 조기에 식별해 최대한 빨리 전역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는 병영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병사를 대상으로 사단급 부대가 운영하던 '비전캠프'를 폐지하고 군단급 부대의 '그린캠프'로 통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비전캠프 입소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병사는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비전캠프 입소 단계는 생략되는 셈이다. 그린캠프 입소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병사는 곧바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육·해·공군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병이 7천여명인데 절차 간소화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장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병영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사단급 부대에 3~4명이 배치된 전문상담관도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GOP 대대와 해병대 2사단 접적 대대에 26명을 우선 배치하고 일반 부대도 연대급까지 전문상담관을 운용하기로 했다. 지휘관이 임의로 분류하던 보호관심병사 A, B, C등급은 지휘관과 군의관, 전문상담관이 모두 참여하는 심의를 통해 분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